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최진혁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I. 서론 :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설정은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내국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균형발전과 중앙집권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정치행정체제,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구조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국가발전(국가경쟁력 제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창출해야 하고,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력방식으로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각 지역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초생활권과 5+2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을 구상하고 있고, 신성장동력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가 중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즉, 현 지방행정체제는 1896년 13도제를 채택한 이후 100년 넘게 중앙집권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부합하기

어렵고, 경제활동구역과 행정구역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고, 다계층제로 인한 기능의 중복과 예산, 인력의 낭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정치사회의 해묵은 지역 감정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기 위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60~70개 전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어떠한 환경변화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정부가 내세우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착근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대응과제)을 강구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¹⁾

II. 충청남도 행정환경변화와 전망

: 5+2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하의 충청남도의 위상 및 지위

1. 5+2광역경제권 하의 충청남도의 위상 및 지위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표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전략

단 계	범 위	개발방향	개발방법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기초수요(삶의 질) 충족	정주여건 개선, 도농통합적 개발, 이역계정(포괄보조금)
광역경제권	16개 시/도를 7개(5+2) 광역경제권으로	광역경제권 형성 및 경쟁력 제고	지역간 연계협력 발굴/촉진,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3대 해안벨트(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벨트(남북교류)	열린 국토 구현	국가주도, 국제적 연계협력, 일반회계, 민자 활용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1)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할 경우 충남의 위상은 이 광역경제권을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단순한 광역경제권역의 공영조물기관으로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에 의하면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충남은 대전과 충북과의 광역경제권역청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영조물기관으로서 경제권역으로 남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지위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전과 충북과의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의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할 경우 충남의 위상은 이 광역경제권을 자치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단순한 광역경제권역의 공영조물기관으로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에 의하면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충남은 대전과 충북과의 광역경제권역청을 두고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영조물기관으로서 경제권역으로 남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지위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전과 충북과의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의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1) 법인격을 가진 초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부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초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부여할 경우 그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정부구성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충남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자치단체와 충청남도간의 기능배분, 자원배분, 인력배분, 지도감독, 협력체제 등도 분권화의 논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제구역(공영조물기관)으로서의 지위부여

광역경제권역을 자치단체가 아닌 경제구역으로서 공영조물(etablissement public)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독립된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청권(광역경제권) 주민의 참여 하에 집행부와 의회가 관여하여 자체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충청권 안에 존재하는 3개 광역자치단체 간(대전, 충남, 충북)의 협력방식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경제권을 대표하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어떠한 지위로 하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즉, 광역경제권의 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장과 의결·심의하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위를 3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과 지방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협의체 중심의 기관구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2. 충청남도의 행정환경변화

1)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신정부는 지역발전의 동인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아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도 전략산업 분야 간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이 광역경제권의 1~2개 선도전략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내어 일자리 창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①수도권 :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 ②강원권 : 의료, 관광
- ③충청권 :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 ④대경권 : 에너지, 이동통신
- ⑤호남권 :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 ⑥동남권 :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 ⑦제주권 :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따라서 충청남도는 과학기술 산업화에 따른 첨단/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전문고급두뇌들의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주여건, 자녀교육 등 인프라 구축, 과학과 기술의 산업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2) 지역적 기능과 위상변화

충청남도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서해안 거점항만 조성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주요 교류 거점으로 그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교역과 교류증대에 따라 서해안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외교적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3) 고속 간선교통, 정보체제구축에 따른 국토중심지 기능강화

충청남도는 충청권이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1세기 고속전철 건설, 초고속정보망의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지역 간 물류유통의 주요 결절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지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4)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육성

역사성이 있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화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 호수 및 산악관광자원의 연계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따른 충남의 위상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에서 학계의 선행연구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개편 대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곱 가지 대안들로 요약할 수 있다(하혜수, 2008 : 6-9). 즉, 도 폐지와 시·군 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도와 시·군의 기능 분리안, 도의 국가기관화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안, 특례시안, 초광역지방정부(강소국연방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중에서 충청남도의 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보면 도 폐지와 시·군 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과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충남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도 폐지와 시·군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현행 농촌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여

60~70개 정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가 폐지됨으로써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약화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관여 내지 통제가 통합광역시에 직접 투입되어 중앙집권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리하여 분권국가체제구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이 안은 충청남도는 폐지된다기보다 충청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 폐지되고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는 모습이다.²⁾ 따라서 충청남도는 도 폐지론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도 체제는 오랫동안의 지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역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 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지역단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접근은 지역민의 반발을 사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도 폐지는 그나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의 공간을 세분화시켜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대도시(서울, 수도권)와의 불균형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실질적인 분권정책추진 없는 도 폐지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위상이 높은 도지사 폐지로 지방정치권은 중앙의 정치적 시너로 전락하게 되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집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 도와 시·군의 기능 분리안

현재의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면서 기능분리에 초점을 두어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광역적·조정적 사무로 한정하고 나머지 주민생활 관련 모든 사무는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도의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개편 없이도 기능조정을 통해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사무) 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군에 대한 도의 감독관행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체제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안에 따를 경우 충청남도는 도와 시·군의 기능배분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배분 원칙과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2)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폐지, 시·군 통합"은 본질과 실제로 볼 때 오히려 "도분할, 시·군 폐지"라고 보아야 한다. 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여러 개로 쪼개어 16개 시·도를 60~70개의 광역시로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이는 시·군을 광역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기우, 2008 :5).

3) 도의 국가기관화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도에 통합시켜 도를 국가 기관화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국가 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와 분권국가체제에의 역행,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인한 지방정부의 위상약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충청남도는 국가에 완전 종속하게 되어 지방화 및 분권국가체제구축에 역행하는 꼴이 되어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4)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그동안 도농분리구역개편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도농통합구역개편을 모색할 수 있는데, 본래 동일한 뿌리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치를 두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광역시는 도의 관할 안에 두되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와 통합되어 보다 광역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원래 같은 뿌리의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그동안 분산 투자되고 있는 행·재정적 비용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위상이 강화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의 상대적인 위상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행·재정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소도시와 농촌도시 등에 적합한 행·재정체제를 준비하면서 상호 협력보완이 활성화되는 통합 행·재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안

특별시와 광역시에 존치하였던 자치구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제를 폐지하여 행정구제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안으로는 준자치구제로 할 수 있는데, 여하튼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의 통합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 전체로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대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광역화를 통한 분권국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단층제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음이 큰 제약요인으로 대두된다.

6) 특례시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에 상응하는 행·재정 특례 및 국가의 지도감독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여 다른 시 지역과 다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고, 자치역량에 상응하는 자치권 부여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럴 경우 충청남도는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대도시가 특례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대도시간의 기능배분과 권력배분, 지도감독 내용을 분권화의 논리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7) 초광역지방정부 (강소국연방제)

이는 기존의 시·도를 초월하는 초광역지방정부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권과 생활권에 따라 6개~7개로 구분하고 있다.

- (1) 경제권 중심 : 6개 - 서울, 중부(인천, 경기), 서부(대전, 충남북, 전북), 남부(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동부(대구, 경북, 강원), 제주권
 -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200여개의 시로 자율통합
- (2) 생활권중심 : 7개 -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경상, 강원, 제주권
 -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120~140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이는 자원의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주정부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분권체제를 강화할 수 있고, 강력한 지방정부의 창설을 통한 국가 경쟁력(인구 500만~1,000만 명의 강소국가)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충청남도는 광역경제 권역서 고찰하였듯이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하에서의 통합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권력구조, 기능배분, 지도감독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초광역지방정부에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단방제 국가체제의 기본틀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 개정과 이를 통한 국가체제의 개편을 요구하게 됨으로 정치논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지역

감정을 고착화시켜 신지역주의를 정당화하여 주고 그림으로써 국가통합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III. 결론 : 충청남도의 과제

5+2 광역경제권에 따른 과제

1) 광역경제권역의 정치·행정체제 구축

광역경제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조직하고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권한배분 및 지도감독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할 것이며, 다음으로 광역경제권의회와 광역경제권도지사의 지위, 역할을 규정하고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2) 지역특화발전 모색

광역행정체제 구축 하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 온 4대권 개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최진혁, 2003 : 360).

- ①서해안권 : 태안해안 국립공원, 안면도, 부여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으로서 해양레저 기능과 중국과의 교역기능을 강화하여 국제관광 및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한다.
- ②백제권 : 백제의 고도인 부여, 공주축을 중심으로 교육, 관광, 문화기능을 복합/발전시켜 국제적인 문화권으로 육성한다.
- ③북부권 : 천안, 아산, 당진축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여 수도권과의 기능분담과 21세기 중부권 교역 및 산업중심지로 육성한다.
- ④금강권 : 금강수계의 치수개발을 통하여 물류, 유통산업, 근교농업 등 대도시 연계기능 특화와 중소규모의 자족적 전원도시로 개발한다.

3)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협조체제구축

다른 광역경제권과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과제

1) 도폐지와 시·군통합 광역시로의 단층제안

만일 이 안이 적용된다면 충청남도는 폐지되어 광역시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의 위상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했던 집권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논리를 강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충청남도의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구역 내지 공영조물기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충청남도는 국가의 지방행정이 실현되는 지점으로서 국가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

2) 광역시와 도의 통합안

만일 이 안이 적용된다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통합되어 과거의 충청남도 안에 대전시가 속하게 되는 과거의 정치·행정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같은 뿌리의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감안한 행·재정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하고, 소도시와 농촌도시 등에 적합한 행·재정체제를 준비하면서 상호 협력보완이 활성화되는 통합 정치·행정(행·재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기우(2008).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에 대한 대안적 제안",
 최진혁(2003). "충청권 행정환경의 변화와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진혁(2008).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과 전망 : 대안검토를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논문집.
 최진혁(2008).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고찰", 한국정책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하혜수(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제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세미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지역발전정책.
 Baguenard, Jacques. (1996). La décentralisation, Paris : P.U.F.
 Baguenard Jacques et Becet, Jean-Marie. (1995). La démocratie locale, Paris : P.U.F.
 Bécet, Jean-Marie. (1996). Les compétences de la commune, CNFPT,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Franc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